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동상이몽 -DDA 협상 출범의 배경-

WTO의 출범 이후 세계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대두된 새로운 통상 이슈와 기존 WTO 규범의 보완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이들 이슈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대규모 라운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출범한 DDA협상의 배경을 알아보기로 한다.〈편집자주〉

**UR** 이후 동 협정의 미진했던 분야인 농산물과 서비스 추가협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는 WTO의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대두된 새로운 통상 이슈(Singapore issues)와 기존 WTO 규범의 보완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이들 이슈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대규모 라운드 출범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상기 의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는 협상 의제를 둘러싼 복잡한 회원국간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각료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뉴라운드의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2년 동안 각국은 협상 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노력을 지속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세계경제의 침체 및 무역 위축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WTO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 회원국이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2001년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4차 WTO 도하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역사적 출범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번 DDA 협상의 전망과 관련하여 이 협상이 과거의 GATT 다자협상과 구분되는 특징은 그 동안 WTO 안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강화되어 개발문제 및 이행문제 등을 둘러싼 DDA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여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협상의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있다.

UR 협상에서도 개도국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커졌지만 협상 타결의 관건은 여전히 미국과 EU 간의 농산물 문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회원국의 구성에 있어서는 물론 다자협상에

임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WTO 내의 개도국의 목소리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DDA 협상을 전망하면서 의제별 개도국의 입장이 무엇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를 중심으로 협상 타결의 전망을 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 1. 무역 환경의 변화와 개도국

일반적으로 국가간 무역협정의 체결은 그 협정의 결과가 협정당사국 모두에게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무역의 원인에 대한 이와 같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경제의 통합이 심화되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화에 반대 혹은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경제통합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그 통합의 질적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무역협정은 관세인하를 비롯하여 단순한 국경조치의 자유화를 넘어 지적재 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국내적 게임의 법칙의 변화를 요구하는

협정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2년 초부터 시작된 DDA 협상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한 국가간 경제통합의 심화는 통합 이익의 국가간 배분 혹은 일국 내 집단간 배분을 둘러싼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지구촌 공통의 '게임의 법칙' 제정에 대

◆  
세계경제의  
침체 및 무역 위축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무역자유화  
를 위한 WTO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 회원국이 보  
다 신속적인 자세를 취함으  
로써 2001년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4차 WTO  
도하각료회의에서…  
◆

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 규범의 제정은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편익을 발생시키는 한편 또 다른 면에서는 성급한 규범 제정은 개별국가 혹은 개별사회의 필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WTO의 DDA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제 통합의 심화가 특히 개도국에 대해 가지는 편의과 비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개도국에 대한 영향의 중요성은 상기한 DDA 협상의 방향이나 그 타결 여부와의 관련성도 있지만 세계화의 심화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선진-개도국간의 소득 격차의 확대가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가. GATT 체제하의 개도국 특혜 조치

제2차 대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무역 환경 및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무역규범의 변화가 선진국 및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 전후 개도국의 국제무역과 관련한 인식은 두 가지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대부분의 개도국은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적지 않은 회의와 개발 주체로서의 정부 능력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에 대해서는 오직 제한적 참여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수입대체를 통한 개발전략을 채택하였고 고관세장벽과 다양한 수입제한적 규제를 실시하였다. 둘째, 개도국이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특혜조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예컨대 무차별적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GATT 체제 하에서 개도국은 선진국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으면서도 국제수지 악화로 인한 무역제한조치, 유치산업보호 정책의 활용, 일반특혜관세(GSP) 하의 시장접근상의 특혜 등 특별하고도 차별적 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도국 특별 대우가 가능했던 것은 1990년 이전까지 대다수의 무역장벽이 국경조치에 집중되어 있던 당시의 무역 환경에 기인했던 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피상적 통합(shallow integration)이라고 불리며 이러한 통합 하에서는 각국 정부가 무역정책의 시행에 있어 이를 국내경제정책과 비교적 효과적

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국경조치를 다루는 무역정책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국내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그 주권을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 있어서도 반경쟁적 상관행이나 노동기준,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다자협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GATT 체제 밖에서 이루어졌고 이행 및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범의 준수는 자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나. 시장개방과 심층적 통합

1980년대 이후 개도국의 경제개발이 수입장벽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대외

지향적 개발모델이 보다 유력한 모델로 부각되었다는 사실과 외채문제의 해결과 투자자본 유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IMF, 세계은행의 정책 쳐방이 보다 설득력을 얻게된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라 구 소련을 비롯하여 많은 동구권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 편입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자유시장경제에 참여하면서 무역자유화의 범위는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제의 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간에는 서비스 무역, 지재권, 투자, 경쟁정책 등 국내정책의 국가간 조화를 도모하는 이른바 심층적 통합(deep integration)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무역장벽의 완화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에 대한 요구는 한층 높아졌다.

선진국간의 심층적 통합과 개도국 그룹의 대외지향적 성향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통합 심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개도국들의 자유화 프로그램 추진과 외국인투자자금 수요의 증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현실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무역협정이 국경 장벽에 국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우는 단순히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저울의 관세를 부과하면 되었다.

그러나 협정의 내용이 공통의 규범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상호주의적 조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의 부여가 훨씬 복잡해지게 된다.

이러한 상호주의적 접근은 다자 협정뿐 아니라 지역협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개도국이 받을 수 있는 특혜의 유일한 형태는 완전한 상호주의에 이르기까지의 유예기간(transition period)을 보다 길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UR 협상에서는 물론 최근 NAFTA나 APEC의 자유화 과정에서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 2. 개도국에 대한 영향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다 개방된 세계시장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 대해서도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경감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개방된 시장이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자극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무역협정에서 볼 수 있는 공통의 규범을 위한 노력 즉, 심층적 통합이 가지는 편익(benefits)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층적 통합에 따르는 개도국의 편

익은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심층적 통합이 가지는 편익의 일부는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들에 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편익으로서는 첫째,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투자 흐름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

6  
보다 개방된  
세계시장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 대해서도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경감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개방된 시장이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는 상황에서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을 통한 명료성 증대는 불필요하고도 비효율적인 과잉경쟁의 단점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은 환경이나 노동기준의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계임의 법칙을 제정하고 명료화하는 것은 개도국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규범이 없거나 명료하지 않

은 경우 개도국들이 잠재적 투자자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압력에 더욱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의 국제규범 제정과 그 이행은 대규모 초국적기업의 독점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초국적기업의 대부분은 선진국 기업이며 또한 선진국은 이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하는 정책—예컨대 전략적 통상정책(strategic trade policy)을 시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 역시 개도국에 대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공동의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시장개방을 거부하기 위한 보호무역론자들의 국내 정치적 노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선진국 내 보호주의자들이 수입품이 환경적 기준 혹은 노동기준에서 국내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입제한을 시도하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밖에도 표준의 국가간 조화 혹은 상호인증은 세계시장의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평균 생산비의 절감으로 세계의 후생에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규범의 확대는 지구촌 시장을 보다 개방되고 보다 경쟁적으로 만듦으로써 세계 모든 국가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